



# 뉴민주당플랜

THE PLAN FOR NEW DEMOCRATIC PARTY

## 국민과의 약속

01. 교육분야
02. 일자리분야
03. 사회복지 · 보건분야
04. 중소기업분야
05. 노동분야
06. 환경 · 에너지분야
07. 통일 · 외교 · 안보분야

# 뉴민주당플랜

THE PLAN FOR NEW DEMOCRATIC PARTY

## 국민과의 약속

01. 교육분야
02. 일자리분야
03. 사회복지·보건분야
04. 중소기업분야
05. 노동분야
06. 환경·에너지분야
07. 통일·외교·안보분야

## CONTENTS

# THE PLAN FOR NEW DEMOCRATIC PARTY

### I. 뉴민주당선언

민주당 현대화의 길 ..... 8

### II. 뉴민주당의 정책방향

총론 ..... 22

### III. 뉴민주당의 브랜드 정책

교육분야 ..... 32

일자리분야 ..... 46

사회복지·보건분야 ..... 60

중소기업분야 ..... 78

노동분야 ..... 96

환경·에너지분야 ..... 108

통일·외교·안보분야 ..... 124

뉴민주당플랜  
THE PLAN FOR  
NEW DEMOCRATIC PARTY

뉴민주당선언  
민주당 현대화의 길

I

# 뉴민주당선언-민주당 현대화의 길

## I.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의 현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성공의 역사이다. 산업화는 더 많은 사람에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고, 민주화는 모든 국민에게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했다. 세계의 역사에서 한국처럼 짧은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사회의 경제격차가 확대되고,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갈등이 증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는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이 확대되고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산업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바뀌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논리만으로 지식경제를 이끌 수 없으며 정치적 민주화만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면서 과거를 뛰어 넘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심화에 따라 경쟁력 및 가치의 원천은 물질 자본에서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확산과 자본의 국제간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자본이나 생산설비보다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개선할 '사람'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적응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자동화를 촉진하고 노동의 이동성을 높였다. 새로운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의 역량이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었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적자원이 경쟁력이 되었다. 결국 세계화로 인한 무한 경쟁과 지식정보화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세계화는 지식정보화와 함께 개인의 생활방식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화와 글로벌 무한경쟁은 혁신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로 인해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결국, 복지국가는 성공한 사람은 더욱 성공할 수 있게 하고,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도약의 토대가 마련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세계화의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강화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화와 글로벌 무한 경쟁은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경제양극화 심화는 정치의 실패 때문이다.”

## 1. 한국경제의 위기와 정치의 실패

최근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이다.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파급되고 다시 재정위기로 치달으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사회의 최대문제는 양극화 심화이다. 양극화 해소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계층간 소득 및 부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소득분배가 외환위기 이후 OECD 국가들 중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 되었다.

양극화는 내수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양극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위기에 기인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여성, 청년, 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가 태부족이다. 일자리의 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는 취업자 4명중 1명이고 비정규직은 800만 명이 넘고 있다.

경제양극화 심화는 정치의 실패 때문이다. 정치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정치의 실패이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복지제도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 정치 실패에 기인한다. 새로운 경제사회의 틀에 맞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집권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토건국가 모델과 이미 한계를 드러낸 시장만능주의를 앞세워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회주의와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억압하는 신권위주의적 통치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용산참사 등 국가폭력이 공공연하게 증대되고 있고, 집회시위 및 언론표현의 자유가 겁박당하고 있다. KBS, MBC, YTN 등 방송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언론약법 불법강행처리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을 정권의 주구로 만들어 끝없는 보복수사, 편파수사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사법부의 독립마저 침해하여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요컨대,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성과를 지켜 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현대화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 2. 반성과 교훈

민주당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민주당의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오늘의 시대적 과제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직시하고,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성찰하여 새로 태어나야 한다.

돌아보면,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 군부독재에 맞서 싸워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민주당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달성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해 온 정당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복지의 확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이러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참패의 원인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있다. 동반성장과 양극화 극복, 지역균형 발전 등 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표방한 기본가치와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수단은 유효하지 못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정책 목표는 좋았지만 유효한 수단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장역할을 강조하였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의 심화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개혁에도 소홀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지기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한계로, 이명박 정부의 거둬들인 실정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참패의 원인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있다.”

## 3. 왜 민주당 현대화인가?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낡은 패러다임의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와 지식정보 시대에 부합하고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과거를 성찰하고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는 ‘뉴민주당-민주당 현대화의 길’을 가려고 한다.

뉴민주당은 글로벌 경쟁과 지식정보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되어버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변화와 개혁을 중시하는 진보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러한 시대정신을 투영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뉴민주당의 길은 중도개혁주의를 현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중도개혁은 우리 민주당의 오랜 가치이자 목표였다. 중도적 관점과 개혁적 지향으로 우리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이제 뉴민주당은 진보적 정체성으로, 중도개혁의 합리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라는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민주당의 정책, 전략, 조직 모두를 현대화시켜 당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 세력의 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와 호흡하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 국민의 삶속으로 파고드는 정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뉴민주당의 길이다.

이제 우리는 뉴민주당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 II. 어디로 갈 것인가?

### 민주당 현대화의 길

20세기 산업화를 넘어선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시대에서는 과거의 좌파와 우파는 낡은 개념이 되었다. 뉴민주당이 추구하는 길은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인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는 것이다. 변화된 시대, 변화된 국민적 열망을 받들기 위해서는 그릇된 보수, 낡은 진보와 선명하게 다르고 시대적 요구에 화답하는 새로운 해법을 창출하는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창조적 융합의 길이다. 민주당 현대화의 길은 좌, 우의 일차원적 직선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고 새롭게 융합하는 다차원적 지평 위에 존재한다.

뉴민주당은 창조적 발전모델을 제안한다. 성장론자는 성장을 통한 분배를 주장하고, 분배론자는 분배 혹은 복지를 통한 성장을 주장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모델은 선성장 후분배 모델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도 아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발전전략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다. 제3의 발전모델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 발전전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부유층으로 성장하는 전반적인 계층상승전략이 뉴민주당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 1. 3대 가치

지난 50여년 평화민주개혁의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흘러 왔던 전통적인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한다.

뉴민주당은 기회(Opportunity), 정의(Justice), 공동체(Community)를 우리의 가치로 제시하며, 이를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한다.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적 엔진은 경제 성장과 교육 투자라고 우리는 믿는다.”

### 더 많은 기회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지향한다.

‘더 많은 기회’는 ‘균등’한 기회이자 ‘확대’된 기회다. 균등한 기회란 차별을 철폐하고 법적 평등을 넘어선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는 보수주의의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기회의 확대’를 뜻한다. 더 많은 기회는 낡은 진보의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지향한다. 결과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누구나 꿈을 이룰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적 엔진은 경제성장과 교육 투자라고 우리는 믿는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번영의 공유는 기회를 증대시키는 핵심적 전략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교육은 번영을 창출하는 성장의 동력이며, 세습되기 쉬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라는 점을 우리는 믿는다. 기회의 균등은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교육은 기회의 균등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이루는 또 하나의 전략이다.

시장경제만으로는 자율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의 확대와 재분배가 동시에 필요하며, 여기에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 더 높은 정의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원리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갖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담긴 최소한의 원칙이다. ‘더 높은 정의’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 기회의 증대는 결국 소수에 의해 독점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오랜 투쟁은 한마디로 정의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 기본적인 정의를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진 소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반칙 및 특권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야 할 곳에 가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개인과 집단이 성, 장애, 연령, 인종, 지역, 종교, 신념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더 높은 정의는 무책임한 보수와 낮은 진보의 한계점을 넘어선다. 무책임한 보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배분만 신봉한다. 낮은 진보는 모든 사람의 기계적 평등만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사회 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제 정의는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더 높은 정의를 모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것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정의는 모든 사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등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다루는 법치와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함께 하는 공동체**

함께 하는 공동체는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정의가 이루어 낸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퇴행적 보수주의의 시장만능주의와 낮은 진보주의의 국가통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이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 흩어진 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믿는다. ‘더 튼튼한 공동체’는 기회와 정의를 더 확대할 수 있다. 공동체는 ‘더 넓은 배려’의 상징이자 자율화와 분권화의 근간이다. ‘기회와 정의’는 공동체를 전제로 병행할 수 있다. 공동체를 외면한다면 ‘만인을 위한 균등한 기회’ 대신 ‘이기적 특권’이, ‘상호 책임의 윤리’ 대신 ‘책임의 회피’가 득세할 것이다. 뉴민주당은 한국 사회가 끝없는 경쟁의 각축장이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가족과 이웃, 학교, 종교단체, 그리고 인터넷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는 우리 삶의 기반이다. 여기에서 상호의존, 상호책임, 상호배려의 시민정신이 구현된다. 또한 공동체는 자치의 근간이다. 공동체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자율화와 분권화도 좌초될 수밖에 없다. 학교 자율화를 논하려면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자율화의 주체인 학교 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 공동체의 강화 없는 자율화는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 흩어진 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믿는다.”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본,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성장의 최고 원동력으로 삼는다.”

범죄는 가족과 이웃, 지역 공동체를 위협한다. 또 광우병 위험 쇠고기와 같은 식품 위험, 환경파괴, 지구온난화는 공동체의 삶과 안정을 위협한다. 모든 위험요소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인간안보와 생명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더 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뉴민주당의 주요 과제이다.

**2. 발전전략 :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

뉴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기회의 복지’(Opportunity Welfare)를 제안한다.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이란 사람중심의 경제,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환경을 두루 감싸는 질 좋은 성장을 말한다. 포용적 성장 모델은 보수진영의 낮은 성장 모델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성장의 개념이 다르다. 낮은 성장은 성장의 양을 중시했지만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질을 중시한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은 낮은 성장 모델이 초래한 일자리 없는 성장, 양극화 성장, 환경파괴 성장, 자원낭비 성장, 빚더미 성장 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신 일자리 중심의 성장,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성장,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성장, 자원을 절약하는 성장, 국가와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한다.

**둘째,** 성장의 원동력이 다르다. 낮은 성장은 물적 자본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본,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성장의 최고 원동력으로 삼는다. 낮은 성장 모델이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라면 포용적 성장은 무형의 지식, 기술, 아이디어의 보고인 중소기업을 중시한다. 혁신과 생산성에 기반을 둔 성장을 위해 대기업에서 영세 중소기업,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다르다. 낡은 성장 모델은 정부만능주의에 빠져 관치경제를 지향하거나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손 놓고 기다리는'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포용적 성장은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강조한다. 보수주의의 '작은 정부'도, 낡은 진보의 '비대한 정부'도 동시에 배격하고 '강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민간 시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받아야 한다. 정부도 제도의 설계자와 시장의 감시자라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서 인프라 건설, 교육, 보건의료, 기술개발 등에서 성장동력기반을 창출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기회의 복지

뉴민주당 발전전략의 또 하나의 기둥인 '기회의 복지'란 만민에게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를 뜻한다.

기회의 복지는 낡은 복지 모델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다르다.

첫째, 복지의 개념이 다르다. 낡은 복지는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과정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기회의 복지는 생산과정 자체에 이미 복지 개념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회의 복지는 생산에서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국민 누구나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둘째, 복지의 수단이 다르다. 낡은 복지 모델은 사후적인 복지개념으로 주로 약자에 대한 소득이전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기회의 복지는 결과의 평등에 앞서 사전적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회의 복지는 사회의 모든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의 오작교를 제공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이 성공할 기회의 오작교, 대학등록금을 낮추어 교육기회를 넓힐 오작교, 농민이 시장개방에 이겨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작교, 한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오작교로 연결된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기회의 복지는 사회의 모든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의 오작교를 제공할 것이다.”

## Ⅲ. 뉴민주당의 신조

50여년이 넘는 민주화 세력의 역사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했던 꿈,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진화해야 한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더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당을 현대화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단지 독재정권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었다. 독재를 물리친 뒤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더 많은 기회'를 확대하고, '더 높은 정의'를 달성하며, '함께 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 신념이었다고 확신한다.

'기회, 정의, 공동체' - 이 3대 가치는 민주화운동의 피눈물 나던 과정에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도, 햇볕정책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도 살아있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직 이를 통해서만 미래로 전진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 가치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정책과 노선, 조직을 비롯한 모든 틀을 현대화시켜야 한다.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아이디어, 실질적 해법을 계속 진화시켜야 한다. 진화하지 못하면 시대를 이끌 수 없다. 민주화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현대화, 진화를 위한 노력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우리에게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강력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낡은 보수·성장만능주의도, 낡은 진보·분배우선주의도 모두 그릇된 선택이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선택, 현대적 해법을 선택할 자격이 있다.

돌아보면, 민주당은 오직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유능한 세력으로 인정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 민주당은 당대의 과제에 맞서 외환위기 극복과 지식경제강국 건설,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 생산적 복지 등 세계 선진국의 정책에 버금가는 현대적 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민주·개혁 세력을 유능한 국정운영세력으로 발전시켰다.

오늘 민주당이 가야할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념이 아니라 정책을, 정체(停滯)가 아니라 혁신을, 당파적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추구하며 국민의 삶,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민주당을 현대화시켜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이 현대화의 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책상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현대적 해법을 찾는 치열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뉴민주당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직 이 길만이 국민들로 부터 지지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흔들림없이 매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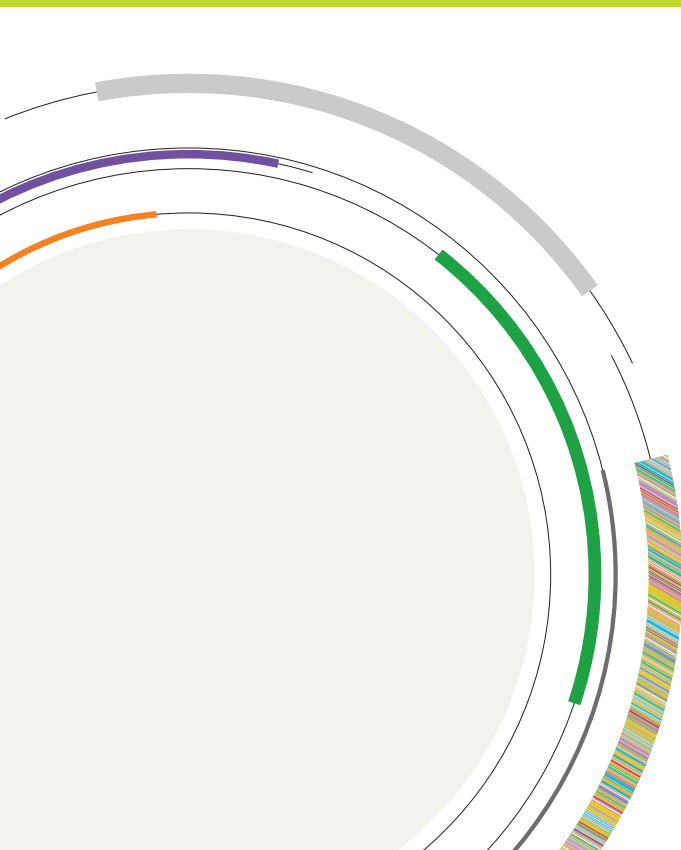
THE PLAN FOR  
NEW  
DEMOCRATIC  
PARTY



# II

뉴민주당플랜  
THE PLAN FOR  
NEW DEMOCRATIC PARTY

뉴민주당의 정책방향  
총론



# 뉴민주당의 정책방향 - 총론

우리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성장만능 시장경제, 토건국가모델, 대기업 편향정책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미래세력으로 한반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뉴민주당은 '절대다수를 위한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

## 첫째,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정책에 있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조만 요란할 뿐 수사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신규 일자리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백수'라 불리는 유사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350만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 및 가치의 원천은 물적 자본에서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물적 자본의 투입보다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 SOC에 대한 투자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의 자원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사람중심 발전모델은 선성장 후분배 모델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도 아닌,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되는 모델이다. 사람중심 발전모델은 사회양극화를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사람의 경쟁력제고, 사람중심 기업, 사람중심 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창의적 교육으로의 전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이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OECD에 비해 두 배 이상 규모가 큰 산업경제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 보육,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여야 한다.

## 셋째,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뉴민주당이 지향하는 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대기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의 원천임을 믿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일자리도, 사람중심 투자도,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주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중소기업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건이다.

## 넷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이 줄어드는데다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절실한 사회적 의제로 떠 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사실상 비정규직과 실업자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 실업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떳떳한 일자리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뉴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인 25%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낮추어 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시정과 함께 사회보험 가입을 늘여 비정규직도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다섯째, 사회투자형 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한다.

한국사회의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사회정책의 미비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빈곤층의 양산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에는 일하는 빈곤층 이른바 '신빈곤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다. 대규모 빈곤층의 양산

은 사회통합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지출 중 교육과 주거비의 비중이 높고 암과 같은 중병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이 높아 고용이나 소득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이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불안정을 넘어 사회전체의 불안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반세기 심지어는 한 세기 정도 뒤진 복지제도를 대폭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낡은 복지국가 모델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

뉴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집중할 것이다. 사회투자형 복지는 사회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노동공급의 확대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투자형 복지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장, 복지 이분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낼 것이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시스템과 국민의식 모두 혁신을 향한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노동, 자원 및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매달리는 경제시스템은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다.

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방식을 반성하고 전환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를 최대한 빨리 지속가능한 경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로 바꾸어 갈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가짜 녹색’ 이 아닌 ‘진짜 녹색’ 경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뉴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뉴민주당은 이념이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실생활에서 출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접근할 것이다. 우리는 진보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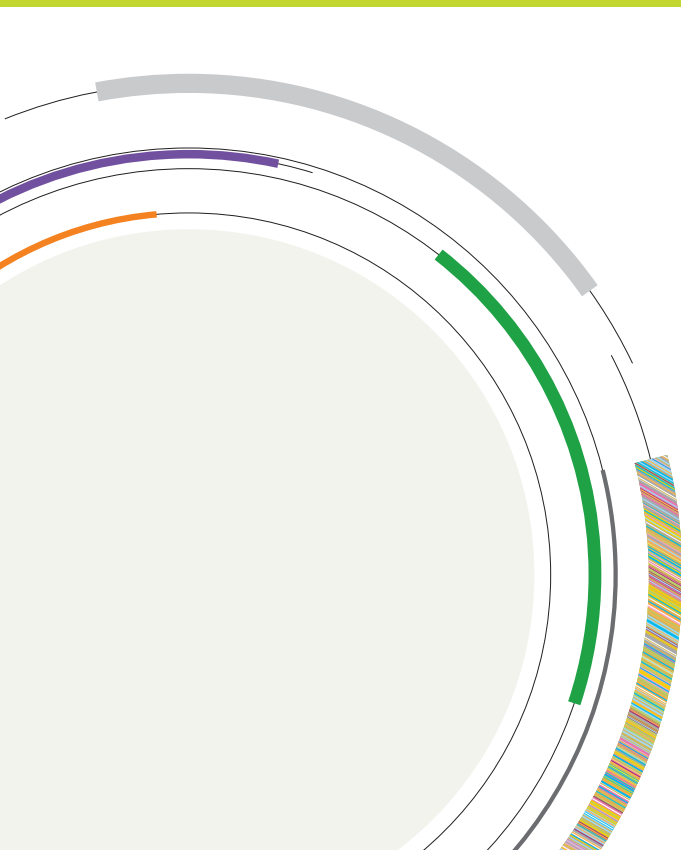




# III

뉴민주당플랜  
THE PLAN FOR  
NEW DEMOCRATIC PARTY

뉴민주당의 브랜드 정책  
가슴이 탁 트이는 정책 **7UP!**



# 뉴민주당플랜

가슴이 탁 트이는 정책

## 7UP!

01. 교육분야
02. 일자리분야
03. 사회복지·보건분야
04. 중소기업분야
05. 노동분야
06. 환경·에너지분야
07. 통일·외교·안보분야

# PLAN 1

뉴민주당의 약속-교육분야

##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브랜드1** 딱익은 국가가 책임진다(출발점 평준화 프로젝트)

**브랜드2**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있는 학교를 만들자

**브랜드3** 교원을 대폭 증원하여 학급당 25명을 실현한다

**브랜드4**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브랜드5**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브랜드6**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브랜드7** 한국교육개혁, 이제는 대학이다

##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하는 뉴민주당의 약속



지금까지 교육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이 있었기에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성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에 지쳐가고 있고 높은 사교육비로 가정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뉴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 모델로 설정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람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다시 설계할 수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 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기회의 확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의 확충, BK21, 누리사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평준화 집착, 3분 정책, 초중등학교 중심의 정책 등 현실 고착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또한 교사평가제 도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사고로 비쳐진 부분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

이명박 정부의 정권교체가 되면서 가장 변화의 바람이 거센 곳이 교육분야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가 폄하됨은 물론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교육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의 기초로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면서 학교 다양화, 대학입시 자율화, 일제고사 등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일제고사를 비롯한 점수높이기 일변도의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창의성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육은 평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누구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이제 가진 자들, 상위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학업성취가 결정되고, 학비부담 능력이 있는 집단만 좋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을 통해 시장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시장주의 교육개혁을 냉철히 비판하고 새로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격차를 교육을 통해 치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녀도 더 이상 낳지 못하여 저출산 사회가 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경쟁과 효율”의 교육정책을 좌시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뉴민주당의  
교육정책  
과제**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풀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보정해 주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뉴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정당상이 교육정책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가치를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닌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가치로 용해 해 낼 것이다. 수월성의 개념을 소수의 지적 수월성에서 모두를 위한 수월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브랜드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GDP 대비 7%로 확대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브랜드 1**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출발점 평준화 프로젝트)**

**1 현황**

우리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격차가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교육 투자는 7 내지 10배의 투자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부유층은 월 100만원이 넘어가는 별도의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시설 기준이 열악한 사설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맡겨져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생애 출발점에서의 교육 격차는 초·중·고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은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를 통해 생애 출발점에서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구현하려고 한다. 초등학교는 의무화되어 공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 반면, 유아교육 기에는 학부모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격차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고, 유·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유아교육 단계의 교육 격차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만 3·4세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및 만5세아 무상교육 점진적 실시
  - 만 5세아 무상교육 14만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균등 지원
  - 만 3·4세아 차등 지원 12만5천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차등 지원
- 우리나라 1인당 유아교육 공교육비는 2,426\$로 OECD 평균 4,888\$의 절반에 못미침.

**사교육비 소득수준에 따라**



2010.2.23 통계청

### 1 현황(계속)

- 특히 이 단계에서 공교육비의 정부부담은 OECD 평균 80.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1% 수준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개인에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 저하와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지움으로써 서민과 저소득층은 출발점에서부터 불리한 교육을 받고 있음.
- 유아교육은 모든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

### 2 정책과제

- 출산부터 영·유아 보육의 전면적 국가 책임 실현 :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
- 영아 보육에 대한 비용 국가가 부담(우선 맞벌이 부부를 포함하여 전체의 50%를 대상)
-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 담당 모든 교사들의 인건비를 초등학교 교원 수준으로 격상,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만3·4세아 소득분위 5분위까지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단계적 무상화
-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
- 초등학교 3학년까지 최상의 교육 환경 제공  
- 학급당 학생수 25명  
- 모든 학급에 학습 보조 교사 배치 등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부터 학습이 뒤쳐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운영(보조교사 선발을 통한 방식과 함께 정교사도 참여)
- 정규수업시에는 정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함께 수업을 지도하는 Co-learning 방식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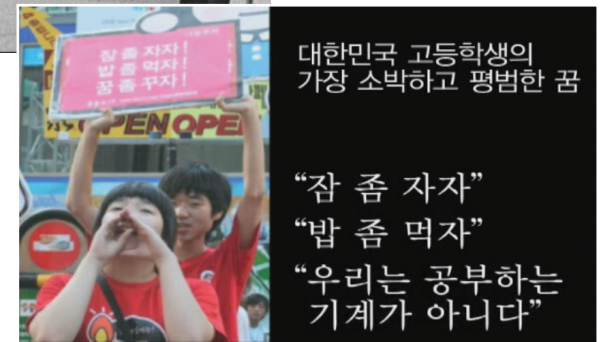
## 브랜드2

###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있는 학교를 만들자

### 1 현황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질적 수준도 세계 최고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는 매우 낮아 학습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역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상위 학교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육, 시험 중심의 과도한 사교육, 단답형 위주의 암기식 학습, 강제된 학습, 학생들의 삶과 분리된 지식교육의 결과들이다.

지난해부터 강제로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와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해 학생들은 혹독하면서도 소모적인 암기식 학력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연간 7~8회에 이르는 사설모의고사,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으로 자라는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촛불집회는 여중생들의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절규로부터 시작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한다.



## 2 정책과제

- **학습 분량 축소, 학습의 다양화·개별화**
  - 교과목 수와 가르쳐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 암기위주의 단편적 수업의 비율이 높다.
  -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주제중심의 수업, 토론식 수업 등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시험 대폭 축소, 다양한 평가 방법 적용**

전국 일제고사 반대, 표집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

  - 세계에서 가장 시험이 많은 학교, 획일적인 평가, 객관식 평가, 평가결과에 기초한 서열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전국적인 일제고사 대신 표집방법에 의한 진단고사로 전환한다.
  -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서술식, 토론식, 구술식 평가를 적극 도입하여 다면적인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한다.
  - 평가결과를 서열화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강약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0 교시 수업반대, 심야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 학교의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시행되고 있는 0교시 수업과 강제적 심야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시험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강제성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운영한다.
- **학생 학력신장에도 적극 노력,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들기**
  -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95%의 학생이 다니는 일반계고의 교육력을 강화해야한다.
  - 재정운영, 인사, 교과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형 자율학교 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 수준별 학습을 확대한다.



# 브랜드 3

## 교원을 대폭 증원하여 학급당 25명을 실현한다

### 1 현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교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8년 기준으로 88.2%에 불과해 부족한 교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OECD국가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초등교육 16명, 중등교육 13명인데 비해 한국은 초등교육 27명, 중등교육 18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전국적으로 5,813개의 초등학교, 3,077개의 중학교, 2,887개의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상담교사는 전국 479명, 사서교사는 6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이 극대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규모가 작아야 한다. 각 학교마다 도서관 등 인프라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 경쟁 교육의 강화로 인해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에 달하고, 학교보건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취학 아동 25%가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학교별 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은 9,460명으로 법정정원 14,652명의 64.5%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정정원 확보에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사 수요는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되어 총 1만 6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 2 정책과제

- **교원의 대폭 증원으로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관철은 일자리 창출**
  - 중장기적으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학교 16명, 중등 13명이 목표이긴 하나 우선적으로 수도권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원을 증원하도록 한다.
- **전국 학교의 50%에 상담교사, 사서교사 배치를 목표로 할 경우 1만명에 가까운 증원 필요**
- **매년 4천명의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 : 2013년까지 연간 4천명씩 총 1만6천명증원**

##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 1 현황

대학 등록금은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맞닥뜨리는 커다란 문제다. 연간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은 이미 보편적인 서민과 중산층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적정 교육비 수준을 넘어섰다.

- 2008년 사립대학 등록금 최고액은 인문사회 881만원, 자연과학 1,009만원, 공학 1,073만원, 예체능 1,124만원, 의학 1,243만원 수준
-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사립이 450%, 국공립대학이 550% 이상 인상되었으며, 국립대 의학계열은 최고 747%까지 급증

<2000년 이후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비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사립대	9.6	5.9	6.8	6.8	6.0	5.0	6.5	6.6
국립대	6.7	4.7	7.3	7.7	9.4	6.8	8.9	10.2
물가상승률	2.3	4.1	2.8	3.5	3.6	2.8	2.2	2.3

※ 자료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대학 등록금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저 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하숙비, 생활비, 교재비 등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날로 과중되고 있는데 비해 대학들은 과도한 이월·적립금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를 포함한 학자금 대출방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손쉽게 등록금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은 학자금을 대출받으수록 등록금은 더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2 정책과제

#### ● 반값 등록금 실현

- 정부가 취업후 상환제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매년 3~4조 정도로 추정된다. 이 금액을 대학재정지원에 투입하면 소득 5분위수까지 등록금을 반액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학생의 50%에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게 된다.

#### ● 취업후 상환제는 보조적 수단으로

- 취업후 상환제 등 장기 학자금 대여방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등록금 상한제, 무상장학금 확대, 장기 학자금 대출이 병행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 등록금 상한제 실시

- 매년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한다.
- 국민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15년부터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를 기준액으로 하여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한선 설정 (2009년 597만원)

#### ●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 우리나라 등록금이 고액인 이유는 대학을 민간재원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민간재원 비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대학등록금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재정에 대한 책임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 ● 장학제도 확대

- 소득 1, 2분위는 장학제도를 통한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상,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 확대, '16년까지 완성
  - 2학기 장학금 + 학습보조·생활비 학기당 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소득1분위 15만5천명 : 1조5,500억원
  - 차상위계층 포함 소득2분위 18만2천명 : 1조 920억원
  - ※ 소득2분위 : 장학금 반액 +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으로 시작, 점진적 확대, 장학금과 등록금 후불제 동시 적용 가능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1 현황

우리는 최소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평등, 인간주의 교육의 실현을 지향하고 공교육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점차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까지 9년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교육은 완전 무상교육이 아니다. 중학생 일인당 연간 약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의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학교 급식비, 방과후 수업 등 학부모 부담금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의무교육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현재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농산어촌지역에 한해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고등학교의 80%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선적으로 농산어촌지역부터 실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시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2 정책과제

-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연간 약 4천억 원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추진
  - 우선적으로 농산어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단위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무상교육 확대시 연도별 추정 예산>

		도시·벽지	읍·면	전국 실시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입학금	대상자 수	7,579	92,665	660,035	634,751	622,580	-
	1인당 면제액	23,537	23,643	23,750	23,857	23,964	-
	소계 (백만원)	178	2,190	15,676	15,143	14,919	48,106
수업료	대상자 수	21,069	253,354	1,939,719	1,904,936	1,867,112	-
	1인당 면제액	1,156,673	1,189,465	1,223,186	1,257,864	1,293,524	-
	소계 (백만원)	24,369	301,355	2,372,637	2,396,150	2,415,154	7,509,665
소요액 (백만원)		24,547	304,369	2,388,313	2,411,293	2,430,073	7,558,595

# 브랜드6

##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 1 현황

2008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97.7%인 745만 6,000명에 대해 학교급식을 실시중이며, 급식 소요경비는 4조 3,75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급식운영비는 1조 4,261억원이며, 이중 보호자 부담액은 8,261억원이다.

<2008년 급식 현황>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초등학교	5,823	5,823	100.0	3,677	3,609	98.2
중학교	3,080	3,076	99.9	2,036	2,015	99.0
고등학교	2,191	2,181	99.5	1,892	1,810	95.7
특수학교	149	145	97.3	23	22	95.7
계	11,243	11,225	99.8	7,628	7,456	97.7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료급식 지원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라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정책과제

-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고등학교 단계적 확대
  - 친환경(유기농) 우수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여 농촌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 여기에 2조원 가량 소요
- 시·군·구 단위 학교급식센터 추진
  - 식재료 검수 등 급식 안전성 강화
  - 물류 비용 절감 및 효율화
  - 농촌과 도시 지역 물류 시스템 연계하여 친환경 유기농 급식을 확대하고, 선계약에 의한 계획적인 작물 재배로 농촌살리기에 일조
  - 급식 시설 미비한 학교에 급식 지원 체계 구축
  - 방학중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 센터 역할 부여
  - 급식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일본 큐슈의 경우 1개소에 시설비 2천억원 - 조리/배송까지 포함

# 브랜드7

## 한국교육개혁, 이제는 대학이다

### 1 현황

대학 교육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이미 고착화된 서열화 체계에 안주하여 우수학생 골라 뽑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야 하는 사명은 도외시되고 있다.

대학의 서열화와 이에 안주하는 상위 서열의 대학들의 그릇된 입시 정책으로 인해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되고 사교육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의 경쟁을 선발 경쟁에서 교육 경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세계수준의 우수한 대학을 육성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교육할 수 있도록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대학 졸업기준을 강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여야 하며, 대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과감히 줄여가야 한다.



## 2 정책과제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입시 성적만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대학을 통해 학문·연구 분야로 진출하고, 일반 기업에 취업할 학생들은 교육중심대학에서 소양을 쌓는다. 특화된 분야의 전문 직업인 및 재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전문·평생교육대학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여 대학 서열화의 해소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세계 100대 대학에 5개 이상의 국내 대학 진입 지원
  - 세계적인 석학을 적극 유치하고
  - 영어강의의 비중을 높이고 외국 유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 대학 특화 : 연구중심대학 -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 육성
  - 현재 추진중인 대학특성화를 가속하기 위해 학부수준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소규모 대학이 많이 만들어지고, 대학원수준에서 연구를 집중하는 대학을 만든다.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시열풍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
  - 서울소재 국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과 함께 학부신입생 선발을 점차 줄여 나간다.
- 50개의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특성화
  - 대학입시 열풍의 근원에는 좋은 대학이 적다는데 있다.
  - 각 지역의 지방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50개 대학을 선정하여 연간 5백억씩 5년 간 지원하여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

THE PLAN FOR  
NEW  
DEMOCRATIC  
PARTY

# PLAN 2

뉴민주당의 약속-일자리분야

##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 브랜드1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 브랜드2 10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 브랜드3 연간 근무시간을 2천 시간으로 줄이면 생산성 향상과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브랜드4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브랜드5 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브랜드6 벤처재도전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
- 브랜드7 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뜻뜻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6%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 1 현황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국내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 2010년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 \* 공식통계상 실업자 88만9천명(전년 대비 15%상승)+그냥쉬었음 147만5000명+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96만3000명+취업준비생59만1000명+구직단념자 16만2000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지표인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 2009년 9월 말 현재 10대그룹의 상장계열사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2005년말 43만9776명보다 5,383명(1.22%)증가에 불과하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102만6603원)도 못 받는 근로빈곤층 273만명으로 총취업자 2357만명의 11.6%수준으로 추정된다.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 대책'이다.

- 정부가 1월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이고 있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축소하였다.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 2 정책과제

-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
  -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 함.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나마 낮은 성장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음. '기업Friendly'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Friendly'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
- 환율 등의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수출위주의 사고에서 내수중소기업위주로 과감히 전환

## 10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 1 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평균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20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함.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1600만명 × 7.5% = 120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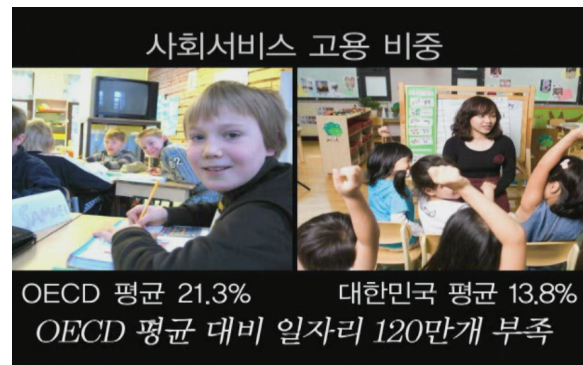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사회 서비스	13.8	17.0	26.8	24.1	32.5	28.0	25.1	21.3
보건 및 사회복지	3.2	9.0	11.3	11.2	15.9	11.9	12.0	9.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 2 정책과제

#### ●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

#### ●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방과 후 학교사업 등

####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
-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문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

####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보완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

# 브랜드3

## 연간 근무시간을 2천 시간으로 줄이면 생산성 향상과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1 현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크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72시간에 비해 38%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연간 근무시간을 300시간 단축하여 2,0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하면 약 200만명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들 것이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기존 취업자가 입게 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 2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임금보전
  - '일자리나누기'를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30%에 대해 1년 동안 정부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 브랜드4

##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1 현황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이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 감면
  - 4대 보험료는 임금의 19% 정도 되는데 이 중 고용주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음. 고용주가 부담하는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함.
- 중소기업이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브랜드5

## 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하다.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 창업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 간은 100%, 그 후 3년 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 확대
-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 인정
-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의 경우 채용인력에 대하여 3년간 4대보험료 감면

# 브랜드6

## 벤처재도전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

###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 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 2 정책과제

### ● 연대보증제도 개선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 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임. 연대보증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는 연대보증을 하거나 가산보증료를 내게 하여 선택하게 함. 다만 가산보증료 대신 스톱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함.

### ● 벤처재도전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음.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벤처재도전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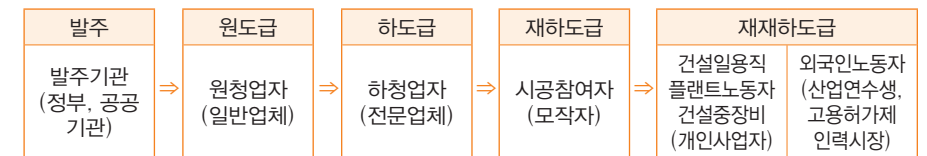
# 브랜드 7

## 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 1 현황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단계의 비경쟁구도, 하도급 단계의 철저한 경쟁구도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건설생산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



\* 2008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일명 모작자) 개념이 삭제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시공참여자를 포함하는 재하도급 이하 단계는 모두 불법임.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단 한명의 기능직(목수 등)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중장비 또한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설경쟁력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 업체는 가격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서 하청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에 따라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낙찰율이 월등히 높은 턴키·대안 및 민자사업의 경우, 원도급의 위험을 온갖 불공정한 특약조건을 붙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직접적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시공참여자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팽개쳐져 있는 실정이다.

직할시공제  
전면도입



### 1 현황(계속)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여전히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업)들의 브로커(broker)를 방조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이 탄탄한 대형업체들의 대형공사에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 2 정책과제

개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청에만 의존하는 건설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여 실질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능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비율을 우선 30%부터 시작하여 50%로 확대
  -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을 일정 비율 법률에 의무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함(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
  -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 원청업자의 의무 직접 시공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PLAN 3

뉴민주당의 약속-사회복지·보건분야

##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 브랜드1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브랜드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 브랜드3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 브랜드4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 브랜드5 국민건강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 브랜드6 학령기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 브랜드7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 브랜드8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금, 의료, 실업, 산재의 4대 보험과 한계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영역도 발전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절대빈곤층 가운데에도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주거와 교육, 의료와 같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개인의 부담이 커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바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양극화가 사회 전 부문에 폭 넓게 진행되고 있어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사회복지정책이 계속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의 흐름을 전환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향후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MB정부 출범이후 '747'과 '대운하'로 대표되는 성장주의, 개발주의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 양극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까지 더해져 지니계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복지예산 평균증가율은 10.1%였던 것이 2009~2013 계획에서는 6.8%로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뉴민주당의 정책**

우리는 지난 10년간 복지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제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추진한 바 있지만 집권 말기에야 비전이 나와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우리는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인 GDP 대비 20%까지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복지모델은 낡은 서구 모델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투자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장이나 분배냐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브랜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브랜드 1**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 현재 1.15명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 교육, 의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임기 기혼여성의 70%가 “현재의 보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보육료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해마다 보육예산을 30%이상 증액하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육예산 증가율은 21%로 줄어들고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출산율 증진을 위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2 정책과제**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현재 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는 474개 읍·면을 시작으로 영·유아 거주 현황에 맞추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한다.
  - 마을회관, 복지관, 초등학교 등 기존 시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시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 2 정책과제 (계속)

### ●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

-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5.5%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을 공공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평가인증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시설에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한다.
- 문제가 있는 민간시설은 퇴출을 유도하고 그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 ●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인 보육 혜택 제공

- 보육시설 우선순위,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에서 일하는 부모가 우선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 사람 소득 중 낮은 소득의 50%만 가구 소득에 합산한다.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모를 위해 반드시 보육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야간 보육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시터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그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에서 베이비시터 자격,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한다.

###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보육료지원통장은 특별 저축예금으로 부모가 우체국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에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정부에서 자녀의 계좌로 6세가 될 때까지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 첫째와 둘째 아이는 매월 10만원, 셋째와 넷째 아이는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 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50%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간다.
- 이 제도를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 출산지원금제도는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도입

- 출생부터 18개월까지 4회 지급한다.
-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한다.
- 2008년 기준 출생아수는 46만 5천명이며 이 중 한자녀의 비율은 51.2%, 두자녀 36.5%, 다자녀 12.3%로 나타나고 있다.
- 소요예산은 약 1조 4,500억 원 정도 예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을 50%부터 점차 확대해 나간다.

# 브랜드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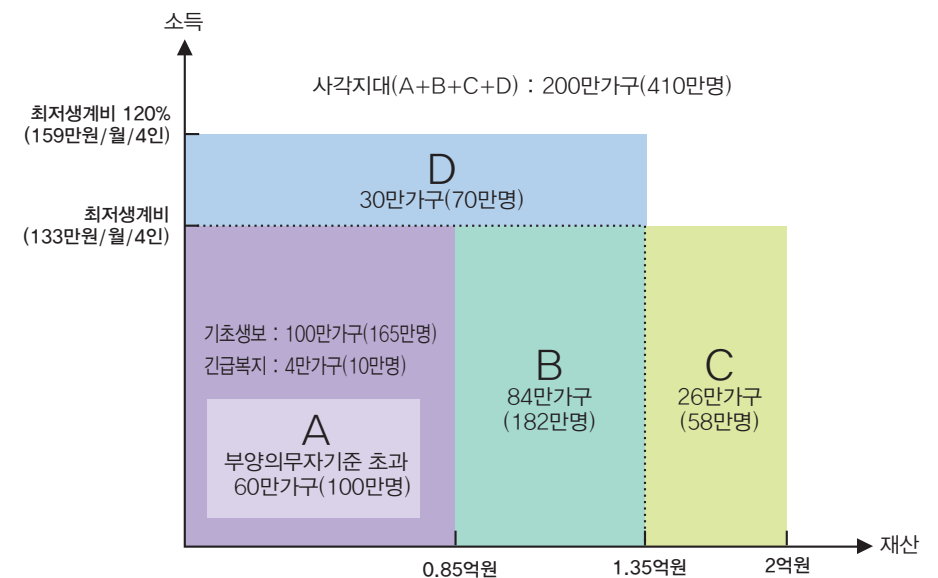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 현재 1.15명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 교육, 의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임기 기혼여성의 70%가 “현재의 보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보육료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해마다 보육예산을 30%이상 증액하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육예산 증가율은 21%로 줄어들고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1> 빈곤 사각지대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2009.3.12.

## 2 정책과제

###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도시가구평균소득의 150%이상(노인 돌보미사업 지원대상 기준)인 가구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 ● 재산기준의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율이 과도한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 2년 100%(월 4.17%)의 환산율을 최소한 4년 100%(월 2.08%)로 하향조정하고, 승용차에 대한 환산율 100%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연계급여 시행

-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은 존재할 것이므로, 이들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은 빈곤층 예방 및 고착방지를 위해서도 선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상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위기 사유에 실직, 사고, 파산,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완화하여야 한다.

# 브랜드 3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 1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래 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현재 노인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 노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다.

한편, 전체 노인인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3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단독가구는 월 8만8천원, 그리고 부부는 최고 14만8백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 2 정책과제

###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

-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A 값의 5%인 9만 1천원에서 10%인 18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급여수준을 국민연금의 10년 가입기군 최저노령연금액(11만6천4백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자 선정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으로 일원화 하여 현행 70% 수준의 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연금구조를 다층화한다.

##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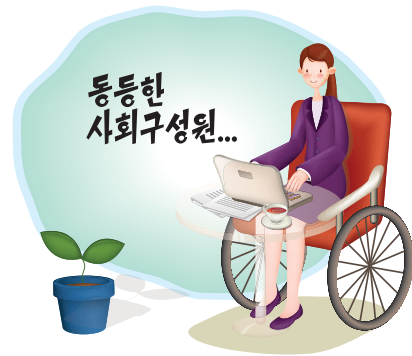
### 1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은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4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등록 장애인은 인구의 5%에 육박하는 24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후천적 장애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MB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장애인 예산의 실질적 감소와 장애인 권리구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MB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연 13%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장애인 예산은 MB정부 들어서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9 회계연도 기준 장애인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0.26%에 불과한 7,299억원으로, OECD 국가 평균 장애인 예산인 정부 예산 대비 2.5%의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지 않고, 시혜적·동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다.



### 2 정책과제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대통령이 강력히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한다.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한다.

- 향후 5년 간 장애인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 이상 확충
  - 현재 0.26%에 불과한 장애인 예산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1%로 확충하고, 그 후 5년 간 OECD 기준인 2.5%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비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19%에 이르고 있고, 비장애인 가구의 1/2이 안 되는 장애인 가구의 열악한 소득 실태를 감안하여 경·중증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의 1/4 이상인 월 25만원 (경증은 12.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전격 실시
  - 장애인들의 생활 스타일, 장애유형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의 실수요와 필요성에 입각한 장기요양 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장애인자립생활을 획기적으로 지원
  - 시설 위주의 장애인정책을 탈피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자립생활 정착금을 대폭 확대 지원(1인당 1천만원)하고, 임대아파트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강구한다.



## 국민건강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 1 현황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보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시작되었다.

건강보험제도는 도입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에게 확대되었고 2008년말 전국민의 96.3%인 현재 4,816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하여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하여 의료욕구가 있어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재정으로 운영됨에 있어 대상자 및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초기의 건강보험과의 보장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렇게 구분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전국민이 의료안전망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국민과 질환들이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들을 의료급여로 편입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질환 가운데 필수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질환에 대한 급여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은 바로 건강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이 기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2 정책과제

#### ● 경제적 사유로 인한 건강보험 체납자의 의료급여 대상 편입 확대

-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장기간 체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구제를 위하여 체납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시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실질적 구제책인 의료급여 대상자로의 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민근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인 2종수급권자는 역사적으로 증감을 반복하여 왔는데, 현재와 같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생계의 곤란함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계를 구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향후 5년간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를 확대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이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1종 수급권자에 비해 국가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2종 수급권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부도위기에 몰린 사업장 지원 대책 마련

- 부도위기에 몰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를 알선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부담방식을 일부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 약자를 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저출산 극복 항목의 급여화, 예방적 진료의 급여 및 국고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 강화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외부에 비급여서비스 항목들이 기형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 특히 희귀난치·암환자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부 진료의 보험급여화, 분만수가의 인상 등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강화해야할 항목이다.  
- 또한 병을 얻은 후에 치료하는 것이 예방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암검진비용의 전면 무상진료 실시 및 아동예방접종의 완전 무료화를 건강보험 급여 외에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노인틀니, 아동치아 교정, 스케일링 등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특히 비급여항목이 많은 치과분야 보장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 예방목적의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 5~14세 소아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 3,200여개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오직 161개 기관만 공공의료기관이 된다. 그러나 이번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에서 보듯, 전국 161개 의료기관만으로는 그 수요를 다 담당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공공의료의 개념이 기관 중심에서 기능·역할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공공기능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예산지원과 함께 의료취약지, 어린이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의 확충이 필요하다.

## 학령기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 1 현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방과후시간에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로 빈곤의 대물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입시위주의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정서 발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도모하고 경제적 양극화의 악순환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지원단가도 동결시키고, 지원대상 수는 오히려 전년도 180개소보다 20개나 감소된 160개로 줄여버렸다. 지역아동센터에는 1개소당 월평균 60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이 나왔지만, 현재 320만원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다.



### 2 정책과제

#### ●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한 총괄지원기구의 설치

- 방과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아카데미는 여성부(\*정부조직개편으로 3월 19일부터 담당),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등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복지원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방과후 활동 지원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통한 질 향상

-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강 또는 참여했던 아동·청소년들이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방과후 활동 교사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 지역아동센터를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주민자치 센터 그리고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6,000개 수준으로 확대

#### ● 교사임용고사 응시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턴교사로 일하도록 하고 그 경력을 임용과정에 반영

- 현재 교직에 입직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초중고에서 성적 우수자들이어서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빈곤아동이나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들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은 교사 임용후 학생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방과후지원 특화센터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 방과후 정신건강 지원센터, 장애지원센터, 약물치료센터 등 방과후지원 특화센터를 만든다. 또한 현재는 각 기관의 인력과 시설여건으로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나 유관기관간의 연계체제를 만들고 상호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한다.

##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 1 현황

우리나라에서 국민생활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 각종 사회적 서비스 분야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회서비스 인력은 약 150만명 정도 더 필요한데 이 숫자는 바로 자영업 부문의 과잉취업의 크기와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한편으로, 자영업의 과잉취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서로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매우 낮는데, 이 중에서도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4%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스웨덴 18.7%, 독일 11.1% 그리고 미국의 10.1%와 비교할 때 한국의 고용비중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 2 정책과제

#### ●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가족 부양과 기업복지 체제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노령화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 특히 보육,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은 새로운 수요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사회투자

-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순한 양적 증대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양질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즉 '지속가능한 고용'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즉 교육·문화의 발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추구, 인적자원 개발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괜찮은(decent) 직종을 창출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 1 현황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housing minimum standard)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주거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상, 재개발 지속에 따른 서민주택의 부족, 주택가격의 변동성 심화, 그리고 소득취약성으로 인해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가구가 늘어 서민들이 주거 분야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빈곤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고통은 중산층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리 지하, 옥탑, 쪽방·고시원 거주자, 찜질방 생활자, 월세체납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 위기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국내 일반가구수는 1,692만가구로 이 중 무주택 임차가구수는 39.1%인 659만8천가구로 추정되며, 소득 1분위에서 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수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40%인 263만9천가구로 추정되고, 소득대비 임대료를 30% 이상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수는 239만5천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소득 1~2분위 계층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과중한데, RIR이 2008년 현재 소득 1분위가 44.88% 2분위 38.4%로 전체 임차가구 RIR 평균 17.5%의 2~3배에 달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매우 두터운 실정이다.



## 1 현황(계속)

또한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206만 가구로 총 가구수의 13%에 달하여 미국의 1%, 일본 4.4%, 영국 2.4%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최빈층인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미달가구의 절반이상인 57.6%가 거주하고 있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정책이 매우 빈약하다. 예컨대, 2008년 말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은 57만5,988호로 총 주택수 1,379만호의 4.2%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34%, 홍콩 31.2%, 덴마크 17%, 영국 18%, 스웨덴 18%, 일본 6.6%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재고 수준인 20% 내외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다.

## 2 정책과제

###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

-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대안적 안식처인 공공임대주택은 200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된 이후 꾸준히 공급이 확대되어 오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다주택·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5%이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연금 등을 활용한다.

### ●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

-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일은 경제, 교육, 보건, 사회, 문화 등에 걸쳐 가정생활의 안정과 복리에 필수 요건이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현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택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조속한 실시

-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료 보조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당초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 이후로 시범사업을 연기하여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주택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 한편 전세 세입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가 5%상한제'와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제 실시

-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임대료 납부연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20%를 넘어서 5가구 당 1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흥능곡지구와 김천대신지구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 차등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또한 파산·실업 등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PLAN 4

뉴민주당의 약속-중소기업 분야

##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자

**브랜드1** 중소기업 인력양성과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브랜드2** '나홀로' 중소기업을 '벌떼형' 중소기업으로 네트워킹하여 경쟁력을 키운다

**브랜드3** 대기업의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브랜드4**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브랜드5** 중소기업이 R&D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브랜드6** 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랜드7** '벤처재도전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브랜드8** 중소기업부를 신설한다

**브랜드9**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브랜드10** 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 중소기업 강국을 만드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중소기업은 창업정신의 모체이자 시장경제의 원천이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영역이다. 우리 경제는 소수 대기업에 의존한 성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양극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50여개가 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숫자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은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갖는 강한 중소기업을 키워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약자보호의 관점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오히려 자생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세계화, 시장주의 확산, 디지털화, 지식기반경제로 대표되는 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합한 대응이 될 수 없다.

###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정책, 부자감세, R&D 투자 세액공제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은 대기업에게 최대의 수혜를 안겨주고 있다.

2010년 예산을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에 얼마나 무관심한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 전체 지원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이 30.8%가 줄었으며, 그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 80%가 축소되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핵심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수출보험기금 출연예산 또한 68%나 삭감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중소기업을 외면한 채 대기업 살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그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경제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뉴민주당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속**

뉴민주당은 경제성장 동력을 중소기업에서 찾고자 한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은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이다.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중소기업 혁신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땀방울의 결과를 대기업이 빨아들이는 불공정 거래구조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승자독식의 산업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속가능하고, 절대다수를 위한 포용적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정책의 기초를 약자보호의 관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시장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활력소가 되고 창조와 혁신의 빛을 발하는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개 브랜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브랜드 1

## 중소기업 인력양성과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 1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 87.5%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중요성에 비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대학졸업생들은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꺼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급여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수준, 근로조건 열악함, 보상능력의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은 인력육성에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육성에 소극적이다. 인재육성 없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에 대해 다양한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육성 수준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인력육성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이 인력육성을 활성화하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대폭 확대**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함. 특히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역특례자들을 중소기업으로 돌려주고, 그 자리에는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줌.
-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제한을 생산현장에 따라 구분해서 접근**
  -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IT업계 등 국내 일자리 수요가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생산현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적극 권장.
- **인력육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비전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양성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정책지원의 최우선대상으로 함으로써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유도**
  - 인재양성은 투자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육성 후 투자이익을 회수하기 전에 이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됨. 이러한 위험요인을 보완해주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입장에서는 인재양성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인력육성기업을 중소기업 정책지원에서 우대받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산학협력기업 지정의 필수요건에 포함시키고, 병역특례요원 배정의 필수요건으로 지정함. 일정수준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신규인력 혹은 고용유지 인력에 대해 인건비의 50%를 1년 동안 지원.
- **교육,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 지원**
  - 일자리나누기로 단축된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추진되는 각종 교육과 훈련, 개선, 혁신활동에 대한 임금을 50% 지원.
- **중소기업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학습 컨설팅,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브랜드2

### ‘나홀로’ 중소기업을 ‘벌떼형’ 중소기업으로 네트워킹하여 경쟁력을 키운다

## 1 현황

기업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으로부터 획득된다. 효율성은 경쟁, 규모의 경제, 혁신을 원천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일차적으로 규모의 영세성이다.

그간의 중소기업정책은 개별지원, 직접지원, 자금지원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개별기업이 각자 능력껏 규모의 경제를 개별적으로 달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별 중소기업은 그 본질적 특성이 중소 규모에 있으며, 규모의 경제성을 향유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자금 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정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태생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중소기업 자생력을 키우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자금지원에서 인프라, 서비스 지원으로, 개별지원에서 공동사업 지원으로 정부정책의 무게중심 이동이 요구된다.

네트워킹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합수는 901개에 불과하고, 조합원 업체수는 65,558개로 조직화 수준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조직화율은 제조업 대비 9.5%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율(협동조합 조합원 수 대비 전체 중소기업수)이 70%에 이르고 것과 크게 대비된다. 낮은 조직화에 더해 조합의 본래 목적인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은 20%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부분이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형태자체가 사업조합인 협동조합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2 정책과제

### ● 협동조합을 통한 협동사업의 활성화

-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경제주체들이 협력과 제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사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지역별로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과 이를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 함.

### ● 시장을 중심으로 기술이 결합하는 네트워킹 강화

- 중소기업 네트워킹은 역할(role)과 댓가(sharing)의 다툼으로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음.
- 시장 선도기업과 후발기술기업과의 결합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상생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협력기업에게는 특별신용보증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

### ● 공동사업 활성화

- 중소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R&D 시설 및 기기 이용, 공동의 품질관리시스템, 공동의 교육 및 훈련시스템, 공유 가능한 물류와 유통망, 공유 가능한 수출지원시스템 및 공동 해외 마케팅사업과 같은 공동사업을 활성화 함.
- 정부정책은 이러한 네트워킹과 협동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견인해내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과 같은 간접지원에 정책역량 집중.

# 브랜드3

## 대기업의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 1 현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중소기업의 규모의 한계로 인한 경쟁상의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불합리한 종속적 관계가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약 60%가 하도급관계에 있는 수급기업이며, 수급기업의 모기업 납품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1%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대·중소기업간 불합리한 종속적 관계는 거래에 있어 분배를 불합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와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마저도 대기업이 빨아들이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해결 없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간 중소기업에 비해 막강한 교섭력을 통해 대기업들이 향유하고 있던 이해관계를 재조정해내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 2 정책과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상생모델로 전환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갑-을'관계에서 상생의 협력모델로 바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의한 금전적 손실과 피해에 대해 확실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그러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함. 이를 위해 공정거래 및 하도급 비리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예시제 도입
  - 현재의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임.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유형을 사전에 열거하는 사전예시제의 도입이 필요함.
-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성과에 연계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양측의 자율적인 이익추구에 부합하는 상생협력관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그러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성과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차별화하는 제도 도입 필요함.

# 브랜드4

##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1 현황

심각한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년간 30%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른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물적, 인적자원이 취약하여 독자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이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개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서 중소기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시장에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수출중소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의 중심은 이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 2 정책과제

-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를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으로 개편
  -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개척과 해외진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정부정책 역량 집중.
  - 이를 위해 KOTRA를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동반자 역할 담당.
-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지원을 축소하고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무역협회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

# 브랜드5

## 중소기업이 R&D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1 현황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빈익빈 부익부 추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낮은 수익성으로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생존 자체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금년부터 시행중인 R&D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일부 대기업에게 연간 1조 이상의 특혜를 주는 '제2차 부자감세'다.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개정 전 3~6%(중소기업 25%)에서 20~25%(중소기업 30~35%)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감세혜택의 90%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개정전보다 무려 5배나 높아지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약 30%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 2 정책과제

#### ● 외부와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 성장의 열쇠는 혁신에 있으나 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역량은 한계를 갖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에만 의존하는 폐쇄적 고립적 연구개발 방식에서 외부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개방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R&D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함.

#### ● 병역특례 중소기업 우선 적용

- 대기업의 경우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최종학력은 석박사가 중심이지만, 중소기업은 학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중소기업 내부에 우수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병역특례제도를 혁신활동에 열성적인 중소기업에 우선적 적용.

#### ● 정부출연연구소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 정부출연연구소와 지역대학 등 연구거점에서 중소기업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하여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제도를 신설함. 또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을 통해 박사급 고급기술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제도를 확대해 나감.

#### ● 중소기업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 현재 대기업의 R&D투자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세액공제제도를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함. 즉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0% 정도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 정도 상향 조정.

# 브랜드6

## 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임.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짐.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함.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함.

#### ● 세제감면 혜택 확대

- 현재 창업 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간은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 늘임.

#### ●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 인정

#### ●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함

## ‘벤처재도전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

###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 2 정책과제

#### ● 연대보증제도 개선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 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임.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해서 연대보증제도는 연대보증을 하거나 가산보증료를 내게 하여 선택하게 함. 다만 가산보증료 대신 스톱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함.



#### ● 벤처재도전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음.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벤처재도전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브랜드8

## 중소기업부를 신설한다

### 1 현황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부 산하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업무가 여러 기관에 파편화 되어 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어 일반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지식경제부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

### 2 정책과제

#### ● 중소기업부 신설

-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 중소기업부는 다른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 집행, 조정하는 기능 담당.

# 브랜드9

##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 1 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의 형태인 대형할인마트는 급속하게 확산돼 현재는 380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성장한데 비해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 상인들은 이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표에 나타나 있듯이 재래시장 매출액이 대형유통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매출액 증감현황>(1999년-2008년)

	1999년	2008년	증감
대형마트	7.5조원	30.7조원	23.2조원 증가
재래시장	46.2조원	25.9조원	20.3조원 감소

대형할인매장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몰락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할 정도로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심각하다. 대형 할인매장 1개당 5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확산은 중소기업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등 4대 대형유통업체의 SSM입점은 총450개에 달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4대 유통업체별 입점현황>(2009년 9월 30일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168	153	119	10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 2 정책과제

-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현행 신고제 및 등록제)
  -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 주거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에 대해 제한함.
-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
  - 50평 미만의 규모가 작은 SSM이 확산됨에 따라 점포의 면적보다는 운영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 있음.



# 브랜드 10

## 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 1 현황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골목경제의 대표적 자영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2009년 8월 10일 개최하였으나 미용·안경 업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 된 적이 있다. 향후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 여러 개 지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를 직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경우 소자본 업소의 폐업과 면허자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 영세서민인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 2 정책과제

- 안경사, 이·미용사 업종의 진입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급.
  - 시장논리보다는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PLAN 5

뉴민주당의 약속-노동분야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

- 브랜드1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추진한다
- 브랜드2 비정규직을 매년 20만명 씩 5년동안 총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브랜드3 출발지점에서 비정규직 발생을 차단한다
- 브랜드4 실업급여 수급율을 44%에서 60%로 확대하고 수급기간도 6~12개월로 연장한다
- 브랜드5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생존임금을 보장한다
- 브랜드6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예 앞장선다
- 브랜드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브랜드8 직업훈련, 평생교육을 강화해 근로자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상과제로 하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매우 왜곡된 모습을 띠어 왔다. 1960년대 이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저임금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강력한 노동운동 억압정책을 통해 이러한 반발을 억눌러왔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이미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우리 경제에도 개방화, 유연화 등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였다. 1998년 초 탄생한 노사정위원회는 같은 해 2월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 냄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시사해주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할 만하다.

정부와 사용자 측이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버리고 최초로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받아들여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종래의 한국의 노사관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노사정위원회의 틀 안에서 사회주체들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갈등적 성격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노사정 주체 간의 불신,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절차의 부실, 노사정위원회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노사정위원회는 불안정한 운영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조건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IMF 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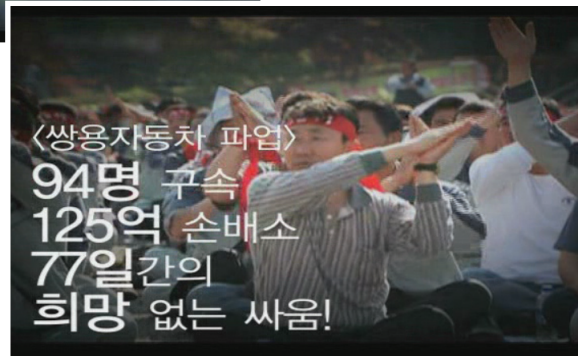
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였다.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음에도 국민의 정부는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집권 1년 반이 지난 2003년 9월에야 비로소 참여정부 노사관계 개혁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공무원 노조 허용 추진,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규제 등 노조에 유리한 것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조합활동 투명성 강화 등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조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복수노조 허용 조항은 3년간 시행이 유보됨으로써 불씨를 남겨 두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채 참여정부에 물려준 과제였다. 참여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및 차별개선을 위해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보호조항 미비로 인한 갈등의 지속과 보다 과감한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제도 개혁 및 자원 투입 등의 미비로 인해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미흡한 채로 끝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성장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기업친화적인 정책기조하에서 노동유연화가 강조될 뿐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만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시장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왔던 정치적 조정 및 조율기능을 배제하고 시장에 맡겨 노사분규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은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주체들의 역할이 약화되어 일자리 창출이나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뉴민주당의 노동정책**

우리 사회의 가장 중차대한 노동문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있어 양극화의 분절구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양극화는 기본적으로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 성별의 3개 단층선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남성 정규직 근로자집단으로 구성되는 핵심부문과 여타의 주변부문은 임금소득, 기업복지, 교육훈련, 사회보험 수혜, 법정 근로기준 보호, 그리고 노동조합의 이익대변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폭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법정 근로기준과 사회안전망 보호의 사각지대가 취약근로자집단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 다수의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과 법정 근로기준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2007년 기준으로 년 2,316시간을 일하고 있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근로시간 보다 30% 이상 더 일하고 있다. 그 결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가족친화적 여가생활을 보낼 수 없으며, 산재공화국이라는 불명예의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브랜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브랜드1

##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추진한다

### 1 현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은 고용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과도한 유연성과 과도한 경직성이 병존하는 이중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취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실업이 바로 빈곤으로 이어지는 고위험 사회이다.

개방적인 선진경제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참여 정부에서도 유연안정성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방향만 제시한 상태로 끝나 버렸다.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성공사례이지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이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유연안정성 개혁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육·의료·주택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병행하는 한국적인 응용이 필요하다.

### 2 정책과제

- 한국형유연안정성 모델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타협 추진
  - 노동시장과 근로생활의 비전과 기본방향 5가지 정책기조
    - ①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안정 추구
    - ② 근로자의 기술과 숙련을 향상시켜 취업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업기간을 줄여주는 유연성 제고
    - ③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의 확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 안정성 정책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
    - ④ 교육·주택·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개혁과 공공투자계획 필요
    - ⑤ 한국형 유연안정성 정책은 노사정간에 안정적인 타협질서를 정착시키는 과정이어야 함

# 브랜드2

## 비정규직을 매년 20만명 씩 5년동안 총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1 현황

IMF 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질적 측면에서 크게 악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 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였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적,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통계청 기준 53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에 이르고 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하면 840만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52.3%).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다리가 끊겨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 2 정책과제

- 매년 20만 명씩 5년간 총 10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 비정규직 100만명이 전환되면 5년 후에는 비정규직이 OECD 평균인 25% 수준에 근접
-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차별화
  -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는 근로자 일인당 월 25만원 지급
  -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하여는 일인당 월 50만원 지급 (무기계약직의 경우 소요 예산은 연간 약 6천억으로 추산)
-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견인장치(Push Strategy)도 함께 마련
  - 비정규직 규모와 이들의 임금·근로조건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공개
  - 정부는 정부발주 공사와 정부조달에 있어 과도한 비정규직 고용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내부방침 천명
  - (가칭) '정규직 전환촉진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법으로 천명
  - 비정규고용 남용에 대한 고용보험료 차등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부여

# 브랜드3

## 출발지점에서 비정규직 발생을 차단한다

### 1 현황

비정규직 제정 당시 현안이었던 다음의 사례를 볼 때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제도로 구성된 현재의 법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 이랜드 뉴코아 사태 : 기간제한과 외주화의 폐해
- KTX 사태 : 간접고용 외주화의 폐해
- 기륭전자 : 불법파견
- 롯데호텔 청소원, 도시철도 청소원, 르네상스호텔 : 외주화와 계약해지
- 코스콤 사태 : 외주화와 불법파견
-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 불법파견

기간제한으로 바꾸었다가 기간제가 급증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유제한 제도입과 불법파견 엄단을 시행했던 스페인의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출발부터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간접고용의 증가이다.

고용은 중소기업에 되어 있는데 일은 대기업에 가서 하는 이들 근로자들은 대개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 2 정책과제

-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 차단**
  - 결원대체, 계절적인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 사용토록 규제
  - 상시적인 일자리에 정규직 사용을 명문화
- **간접고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불법파견 엄단**
  - 사내 하청근로자들을 차별시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
- **파트타임의 정규직 확대**
  - 정규직형 파트타임제는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상여금과 퇴직금, 그리고 휴가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근로자로 한정하여 적극적인 고용촉진 정책 추진

# 브랜드4

## 실업급여 수급율을 44%에서 60%로 확대하고 수급기간도 6~12개월로 연장한다

### 1 현황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고용보험이 적절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20~30%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44.7%(2009년 기준)에 그치고 있어 실업자 열명 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4.5명 꼴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실업통계 자체가 과소 보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실업급여 수급비율은 30%선으로 낮아질 것이다.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실직 전 임금의 40% 미만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구직 급여 1일 상한액이 10년 전 임금수준인 4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3~8개월로 되어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간의 평균근속연수가 4.5년으로 극도로 짧아 수급기간이 실제로는 4개월 가량 밖에 안된다. 이와 같은 짧은 수급기간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소득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정책과제

- **실업급여 대상을 현재 44.7%수준에서 60%까지 확대**
  -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대상에 포함
  -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 가입률을 현행 50%수준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처벌강화와 유인지원책 병행
-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연차적으로 6~12개월로 연장**
-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1단계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로 수급기간을 연장한다고 가정할 때 우선 1단계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7,200억원으로 추산**

# 브랜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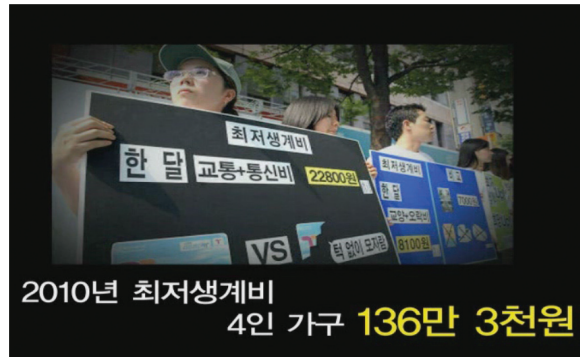
##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보장한다

### 1 현황

최저임금제는 노동빈곤층의 최소소득을 법률로 보장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이며 주 40시간, 월액으로 환산하면 836,000원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근로자가구 평균 가구원수는 3.4명으로 법정 최저임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081,000원의 77%에 불과해, 사실상 '최소수준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미만 근로자는 2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2 정책과제

-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 단계적으로 최저생계비(3인가족 기준 1,081,000원)수준으로 인상
-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 전개
  -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계약을 서면화
- 정부등 공공부문의 조달,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표준임금 적용
  -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정부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조

# 브랜드6

##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다

### 1 현황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2007년 기준으로 년 2,316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들 평균 근로시간인 1,768시간 보다 무려 54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OECD 국가중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가족친화적 여가생활을 보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OECD 최저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중대산업재해(사망사고)비율은 서구 선진국을 비롯하여 경쟁대상 개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산재공화국이라는 불명예의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GDP 대비 1.67%(2008년)에 이르고 있다.

### 2 정책과제

- 실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으로 가족 친화적, 안전최우선 일터 만들기
  - 5년 이내 연간 2,000시간으로 단축하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을 목표로 단축을 지속 추진
  - 법정 연장근로시간 상한(주 12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
- 유연근무체계의 확산을 통한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와 일과 가정의 양립(work-life balance)정책 추진
  - 근로시간 단축을 동반한 워크셰어링 · 교대제개편 · 정규직형 파트타임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
-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돕기 위한 제도 · 정책적 지원 강화
  - 여성 취업경력 연속성 보장을 위한 일-가정 조화의 촉진 정책 확대 실시
    - : 제도개선과제로서 「출산계속고용지원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 :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인센티브 마련
  - 육아-출산관련 휴가/휴직후 복직을 보장토록 하고, 육아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 운영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장 대상의 지역 공동 보육시설 운영 지원
- 산업재해의 중대사고 건수 감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규율 방안 및 정책을 시행
  - 21.0%(ILO 2006년 기준)인 산재율을 2015년까지 10% 수준으로 감축
  - 산재실적에 대한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공시하게 하고,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교육 실시 지원

# 브랜드7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1 현황

계약제, 기간제, 파견근로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증가하면서 위임과 도급의 형식을 가진 특수형태의 고용계약이 등장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이면서 노동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도 노동관계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2 정책과제

- 100만 특수형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강화
  - '특수형태 근로자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골프경기 보조원,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하여 법제도적 조치를 정비하여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보호
  - 택배와 대리운전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제도적 보호 확대

# 브랜드8

## 직업훈련, 평생교육을 강화해 근로자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 1 현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위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고 하는 노동시장 모델이 자리잡은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다.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유연안정성은 실현 가능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연안정성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의 근로자들은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직기간 동안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하며, 실직기간을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짧지만, 그것이 곧 고용불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자 스스로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이동하거나, 직업교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근로자의 자생능력, 그것이 유연안정성의 핵심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은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이다.

우리나라의 점점 고용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짧아진다. 노동시장은 유연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로자는 정작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직업교육 참가율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직업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비율은 13.5%에 그치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평균 훈련기간은 90일이었으나, 2000년대는 5일로 훈련기간조차 짧아졌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2009년의 공식 실업자수는 88만 9천명이지만, 실업자 중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15만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1.6%(2004년)로 OECD 평균인 35.6%(2000년)와 차이이며,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14.1%(2004년)로 OECD 평균인 37.1%(2002년)에 한참 못 미친다.

### 2 정책과제

- 직업훈련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확대하고 실업자 훈련도 대폭 확대
  - 2015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훈련 필요한 실업자의 직업훈련 수혜율은 2013년까지 40% 이상이 되도록 확대
  - 직업훈련을 확대할 경우 2015년에는 연간 5조원 소요 전망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기금 마련
  - 자영업자들을 위한 교육훈련기금 마련

# PLAN 6

뉴민주당의 약속-환경·에너지분야

##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한다

- 브랜드1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아닌 강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 브랜드2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 브랜드3 2020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green jobs) 50만개를 창출한다
- 브랜드4 2020년까지 녹색주택 300만호 시대를 달성한다
- 브랜드5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든다
- 브랜드6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늘리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
- 브랜드7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노동집약적이고, 원자재와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 의존한 60년대 이후의 경제사회시스템은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순환구조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과다한 이용과 고갈에 대한 위협은 지금의 경제사회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시스템과 국민의식 모두 혁신을 향한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적 기후변화는 지구생태계와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명백한 위협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조만간 고갈될 에너지 자원인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대문명이 일으킨 전 지구적 위협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의 국가로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으로 성장한 세계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며(석유 6위), 에너지 소비의 83%가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체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성장 지향의 경제체질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전환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자연 파괴적이며 낭비적인 토건적 국가발전전략을 통해서 유지해왔다.

자원에 대한 수요관리정책은 여전히 공급정책에 종속되어 있다. 물이 부족하면 댐을 건설해 공급해왔고, 주택과 토지가 부족하면 녹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훼손해 공급해왔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해외에서 자원수입 및 개발과 원자력 확충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러한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자원의 낭비를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경축사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4대강 사업 등 토목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공급중심의 자원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모델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오히려 저탄소 녹색경제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을 현재 4.2%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며, 원자력을 26%에서 41%로 확대해 나가는데 비해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 11%를 목표로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의지가 거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원자력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중심의 정책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민주당의  
환경정책**

지금의 경제시스템은 21세기 환경·에너지·식량 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경제체제가 아닌 한반도와 지구문명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반도 생태계와 지구문명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시급히 행동해야 할 절실한 과제이다.

민주당은 환경적 토대를 파괴하고 위험한 기후변화를 조장하는 현재의 추세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지속가능한 경제, 분산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주요한 동력으로 발전하는 경제, 고도로 다양화된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 모든 것을 재사용·재활용하는 녹색 경제로 시급하게 전환시키는 일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중심으로 전환한다.**

- 우리 사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보다 공급을 늘이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평균의 2.5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댐의 추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자원개발과 원자력 발전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토지, 물, 에너지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부문, 국토해양부의 국토계획기능, 환경부의 환경계획기능을 통합해 국토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한다.

■ **건설투자비용을 줄이는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개발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환한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약 19%로서 OECD 국 평균 11%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조직도 건설토목부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SOC사업에 대한 국회심의 강화와 외부 심의기구를 도입하여 '스마트 SOC'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예외조항을 대폭 늘려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경제성 평가 외에도 환경평가항목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평가를 적극 도입한다.
- 70년대와 80년대에 탄생한 수많은 개발공사의 기능을 공급중심에서 인프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 **녹색경제로 전환한다.**

- 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해외자원개발이나 원자력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간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분산형, 지역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에너지 가격구조와 세제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개편한다. 탄소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발전분야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등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한다.**

- 과도한 농약과 과도한 비료사용은 수확을 늘이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천적감소, 병해충 내성 증가,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농산물 안전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 반면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은 FTA 등 시장개방 속에서 농업이 지향해야 할 희망이고 대안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브랜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아닌 강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 1 현황

현재 정부는 16개 대형보, 5.7억 입방미터 하도준설을 3년 안에 완료하는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변경, 계획발표 4개월 만에 완료되어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전체예산 22.2조원 중 11.2%만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물확보, 홍수예방, 친수공간 조성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13억 톤의 물 확보공급 정책은 물수요관리 정책과 전면 배치되며, 산간 지역, 영산강 지역 등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외면한 모순된 정책일 뿐이다.

또한 16개 대형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를 개선하는 방식은 환경적 영향의 사후관리(end of pipe)에서 입지규제 등 사전예방하도록 한 환경정책의 방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자연습지 훼손을 전제로 인공 생태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방류 등 생태파괴적 사업이며, 물관리 정책측면에서 지천 살리기와 유역관리 강화라는 면단위(유역) 계획에서 선단위(4대강 사업)로 후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2 정책과제

- **홍수피해, 수질악화, 물부족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우선 투자**
  - '98년부터 '07년까지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의 산간, 동해안 시·군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 또한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피해는 지방하천(55.0%), 소하천(39.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홍수피해는 97.3%의 제방정비가 이루어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등 지천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 4대강 중 수질오염과 가뭄이 가장 심한 지역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며,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태백 등 산간 고지대와 섬 지역으로 이 지역의 상수도관 개량을 통한 누수율 제고, 소규모 식수원 개발, 지하관정,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 **댐 중심의 수자원 공급이 아닌 상수도 누수율 제고, 대체용수원 확보**
  - 댐 중심의 공급정책을 지양하고 유역 물순환 개선과 장래 물부족에 대비해 대체용수원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빗물 활용, 중수도 사용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 전국 평균 14.2%에 달하는 상수도 누수율을 7% 이내로 낮추며, '07년 현재 6.4억 톤(9.9%)만 재이용되고 있는 전국의 고도처리로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강'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
  - 4대강 사업 예산은 22.2조원에서 13.6조원(61%)이 늘어나 총 사업예산은 35.8조원에 달하며, 향후 설계변경, 준설토 오염정화 비용 등이 추가될 경우 총 40조원까지 증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당장 서민·중소기업·일자리·교육·환경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교육, 복지, 보육, 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한다.

##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 1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은 개발계획인 국토계획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발을 중심에 놓고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급속한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개도국에 적합한 방식이지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생태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과거 개발방식과는 다른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 2 정책과제

#### ● 친환경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현재 친환경예산은 GDP 0.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환경오염 예방 및 복원, 환경성질환 대책,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정책, 친환경 대중교통 확장 등에 투자한다.
- 이러한 친환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SOC 개발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의 전환하며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세계개편안을 마련한다.

#### ● 현행 국토계획체계를 환경계획 중심으로 정비

- 현재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대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계획체계를 정비한다.

\* 친환경예산 규모는 '07년 예산안 기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3조 3003억원, 산자부 에너지특별회계, 전

력산업기반기금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증진사업 예산을 의미하며, GDP 대비 선진국의 친환경예산은 덴마크 1.4%, 독일 1.3%, 네덜란드 1.1%임.

- 계획수립단계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T/F팀을 꾸리되 관련된 기관(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자부, 지경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국토의 환경용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정한 기준 정립

- 전국토의 환경용량을 현행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되는 수준으로 조사 및 평가하며, 평가된 환경용량을 기준으로 이용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환경부, 국토부, 행자부 등이 각각 조사하여 축적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환경부 기준으로 통합 조정한다.

#### ● 적정 SOC 공급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이미 세계적으로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지역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무분별하게 SOC가 공급되는 비효율과 낭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기존에 이미 연구되어 있는 '환경용량 평가기법', '개발가능용량 평가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 이렇게 환경용량에 근거한 공간개발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교통량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과 전기 등의 공급을 정상화시켜 생활의 질도 높일 수 있게 된다.

#### ● 무분별한 SOC 사업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폭 강화

- 자원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은 예외 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할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사업추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사업은 사업 재추진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평가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환경성 평가 항목을 대폭 강화하여 경제성 평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고, 외부평가기능을 적극 도입한다.

# 브랜드3

## 2020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green jobs) 50만개를 창출한다

### 1 현황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양극화 심화, 지구환경위기 심화는 전 지구차원의 문제이며, 유엔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성장의 한계에 대한 고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환경일자리(Green Jobs) 확산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개발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복원(Restoration)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자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후변화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일자리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업종과 일자리를 대체하여 환경산업과 환경일자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 2 정책과제

-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독립적인 '환경일자리 촉진 전담기구' 구성
  - 고용·환경·복지 부문은 사업의 성격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들 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도입한다.
  - 탄소경제를 넘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재제조 산업 활성화, 친환경 교통 활성화, 주택단열 등 효율을 높이는 일자리, 유기농업과 집단농업 활성화, 생태계 복원 및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자연환경안내원, 에코가이드, 자연조사 및 모니터링, 마을환경해설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를 제시한다.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집수리지원프로그램 추진
  - 저소득층의 주택 단열공사 무상 수리를 통해 저소득층 고용창출, 온실가스 감축, 저소득층 실질 복지효과 고취 등의 동시다발적 사회 편익을 추구하는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집수리지원프로그램"(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도입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층은 120만 가구에 해당하며, 관련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 에너지복지와 에너지효율개선, 사회적 일자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 브랜드4

## 2020년까지 녹색주택 300만호 시대를 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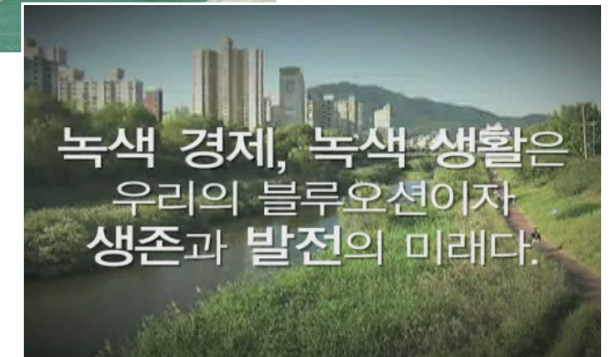
### 1 현황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본격적인 재개발, 재건축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도시외곽에 신규택지개발이 한창인데, 그 동안 주택의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한 탓에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하지 못했다.

약 1,400만 호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주택은 창문, 벽, 지붕의 단열능력 향상만으로도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주택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녹색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연간 1ton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고, 연간 100만 달러 당 50개 이상의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DOE)'에 의하면, 투자한 \$1당 사회적 편익은 총 \$3.71로 나타나 재정투입 금액의 약 4배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

\* 에너지빈곤층은 소득의 10%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함.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16년까지 해소하고 '30년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2단계 추진 계획



## 2 정책과제

- **녹색주택 300만호로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
  - 2020년까지 녹색주택 300만호 시대에 진입하는데, 신규주택 250만호와 기존주택 50만호를 녹색주택으로 전환함을 통해 주택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
  - 패시브하우스에 준하는 녹색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고, 2011년 이후 건축되는 신규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포함)은 녹색주택 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속력이 있는 규정과 인센티브 규정을 포함시킨다.
  - 기존주택 개선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통해 녹색주택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차상위 계층과 무주택자들을 우선 지원하는 대상기준과 시공항목 등의 지원기준을 마련하며, 자원마련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기금(주택개량자금)을,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저소득층 주택과 마을공동시설을 대상으로 100만호를 선정하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우선 추진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수혜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 에너지 진단을 통해 주택개량 및 단열, 송풍, 난방, 고효율 전기기구로의 교체를 진행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단위에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의 기획, 교육, 시공, 효과분석 등을 총괄한다.
  - 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100만호를 10년에 걸쳐 매년 10만호를 지원할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2천억 원이다.

# 브랜드5

##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든다

### 1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외길이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거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지역과 전 부문이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상당히 취약하고, 에너지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자립적인 지역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공급 등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 2 정책과제

-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234곳 만들기**
  - 일정규모의 마을단위로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마을단위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소규모 인프라를 갖춘다. 에너지위기에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마을을 2020년까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 만든다.
  -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과 교육, 경제, 문화 등이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조세 중에 탄소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조세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이를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조성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동네에너지 디자인을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계획, 지역에너지 조례, 지역별 에너지 위원회, 에너지 관리공단의 재편,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자립 가이드라인 활용, 지자체별 담당 전문 공무원 육성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광역지역별 에너지자원 특성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며, 소규모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개선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 오스트리아 무레크, 독일 윤데, 덴마크 삼쇄섬, 인제 남전태양광발전협동조합의 예와 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지역에너지 기업을 육성하여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 브랜드6

##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늘리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

### 1 현황

턱없이 부족한 녹지 공간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는 충분한 휴식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대기질과 열악한 녹지율 등으로 인해 건강피해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자연공원의 산지 면적 92%를 제외한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은 4.64㎡(약 1.4평)에 불과하다.

이는 WHO와 FAO에서 권장하는 9.0㎡(약 2.7평)의 절반 수준이며, 런던, 뉴욕(14.12㎡), 댄쿠버(23.46㎡) 등 세계 대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동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7.89㎡), 상해(9.16㎡)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녹지는 급감하고 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생활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녹지는 개발로 사라지는 한편,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로 조성되는 녹지는 휴식이 불가능한 가로 녹지이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가두어져 있다.

1인당 녹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열섬 현상은 심각해져 도시와 외곽의 기온차가 10℃나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2 정책과제

- 지역별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두 배로 늘리기
  - 서울 등 주요도시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재구조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이 과정에 공원면적을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만든다.
  - 신도시 개발의 경우 개발지침에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1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 옥상에 채소밭 가꾸기와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업은 도시 내의 다양성을 높이고,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매력 있는 요소이다.
  - 옥상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도시의 경관 개선과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
  - 이면도로를 활용한 간이 채소밭 가꾸기, 텃밭상자 나눔운동, 학교 농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 브랜드7

##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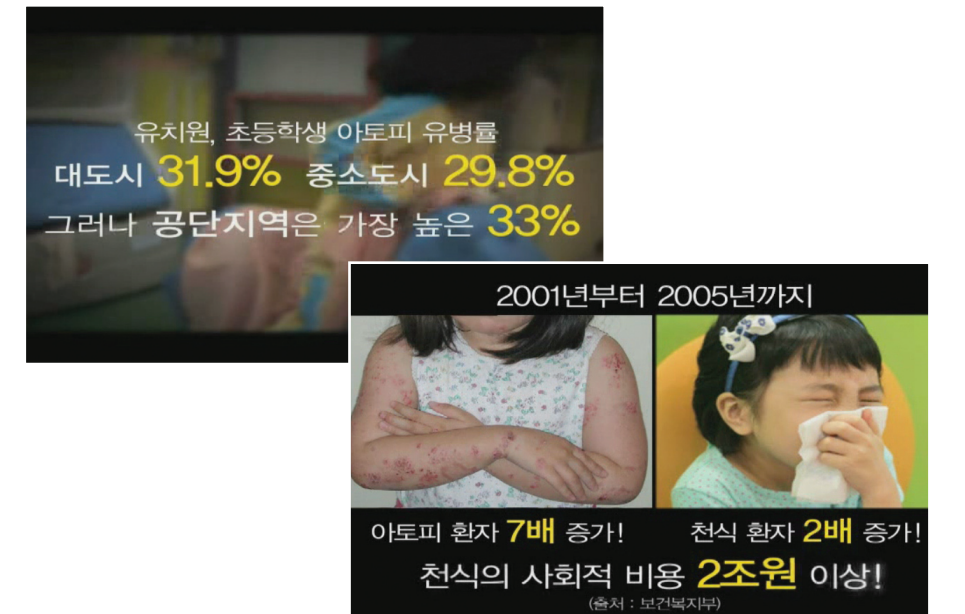
### 1 현황

대기오염과 먹을거리로 인한 아동들의 환경성질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로 어른보다 몸집은 작지만 단위 체중당 호흡량은 50%나 더 많아 대기오염물질을 더 흡입할 수 있고, 한편 어린이들의 학교주변의 먹을거리 오염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토피의 경우 지난 30년간 2~3배로 늘었고 천식은 5배 이상이 증가하였는데, 국내 천식 유병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4년에 3.4%에 불과했던 어린이 천식 유병율은 83년에는 10.1%, 95년에는 13.0%, 2003년에는 16.3%(6~12세 기준)에 달해, 40여년 사이에 천식 유병율이 4.8배나 증가를 보이고, 특히 0~4세인 경우는 20% 이상이 천식이다. 이처럼 환경성 질환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아토피질환과 천식으로 인해 5조 9천억 원에 이른다.

한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내의 문방구,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사한 결과, 아직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제품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건강은 국가 성장의 핵심 요소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장기적으로 크나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2 정책과제

- **친환경 급식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해 유해한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
  - 학교와 유아보육시설의 급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가공식품 화학조미료 사용을 금지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학교와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도록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
  -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공공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치료, 관리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오염문제 해결**
  - 현재 그린푸드존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11,273개 학교 중 7,107개 학교를 6,497개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고 그린푸드존 해당 학교 주변 200m에 표시판을 설치하고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 한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유해한 '식품첨가물'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수판매업소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 PLAN 7

뉴민주당의 약속-통일·외교·안보분야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연다

**브랜드1**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 제정·실천한다

**브랜드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병행 추진한다

**브랜드3** 남북상생의 동서경협특구를 구축한다

**브랜드4** '코-유라시아(Korea-Eurasia) 시대'를 개척한다

**브랜드5**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아시아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브랜드6** 21세기 선진·과학군을 육성한다

**브랜드7** 북한 인권개선과 '함께 사는 남북'을 준비한다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여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여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요청이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민주정부) 10년 동안 꾸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당국간 대화의 지속, 경제협력의 진전, 남북 상호간의 인식변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민주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에서 비롯된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체제인정과 실질적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간에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과정은 진행형일 뿐이다. 남북교류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핵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우리의 순수한 대북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세계와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열렸던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보수세력의 끈질긴 퍼주기 논란으로 남남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를 지속하면서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정부가 10년간 애써 조성한 한반도 평화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가 이룬 가장 가치적인 남북관계의 성과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 남북철도 연결 사업인데,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의 공간으로 작용했던 이들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일철학이 부재하고 이념적, 냉전적 접근으로 6·15 선언 및 10·4 선언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냉전적 자세와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지속이 초보적이거나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간 신뢰를 파괴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대북구상인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은 현실인식이 결여된 정치 선전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북한내부가 급속히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딴 판이다. 단지 구호를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이 장기화·구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한 간의 상호 불신으로 서해 NL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당연히 유사한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 6월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 적극 지지

이명박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각급의 남북대화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착실하게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 뉴민주당의 통일정책

우리의 통일미래는 상생평화의 지속 가능한 사회, 인간의 존엄이 확보되고 자유가 넘치는 사회, 풍요와 복지의 번영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의 평화미래와 번영, 그리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민주정부 10년의 냉정한 평가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 및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정착해 나갈 것이다.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를 계승하면서 이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통일 및 외교안보분야의 핵심적인 7대 브랜드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우리의 평화미래를 강력히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당장의 남북관계가 다소 어렵더라도 냉철한 판단과 긴 안목으로 차분히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 브랜드 1

##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 제정·실천한다

### 1 현황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준비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그간의 화해 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 방향과 대북관을 둘러싸고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을 표출하면서 오히려 내부적 균열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남남갈등의 창조적 해소야말로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가능케 하고 향후 남과 북이 같이 사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여는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남남통합을 넘어 남북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이미 끝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냉전적인 유물인 일대일(1:1)의 상호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평화통일을 주도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정책과제

#### ●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도출

-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초를 도출하여 공식적인 '통일정책 대강(大綱)'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의 제정

-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여야,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한 '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이를 통해 정권이나 정파를 초월한 국민통일협약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일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 ●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실질적 확립

-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및 사후평가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전방위적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한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병행 추진한다

### 1 현황

민주평화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답보 상태에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으로 북한 핵시설 봉쇄화 조치는 상당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북한은 2008년 6월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에 이어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고, 미국은 그해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내 네오콘과 함께 북핵폐기와 검증방법에 대한 대립을 고조시키면서 6자회담의 진전을 좌초시켰고,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북한도 핵시설 재가동과 2차 핵실험(2009년 5월) 등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였고, 유엔 대북제재에 이어 6자회담이 중단되고 말았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는 6자회담과 평화협정 문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 6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포럼 구성 합의(2005.9.19)
- 미국, 핵폐기시 평화협정 서명 용의 표명(2006.11. 하노이, APEC)
- 미국, 한국전쟁종결을 위한 평화협정 서명 의사 재차 표명,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본인의사 전달요청(2007.9.7, 한미정상회담)
-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 위한 남북공동 노력 합의

이명박 정부는 선(先)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 요구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 2 정책과제

-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연계, 병행 추진
  -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관계정상화, 북미관계정상화)이 병행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공세적 역할이 요청된다.
  -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관계정상화(정치군사적 신뢰구축)와 북미관계정상화를 두 개의 기본축으로 하여 수립되며, 이러한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핵폐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남북합의 준수

-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지양, 군사적 신뢰조치, 6.15 남북공동선언의 경제.사회.문화협력,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 노력, 그리고 10.4 남북정상선언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공동노력, 경험 및 투자 활동 등의 분야에서 조속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당사자간 노력

-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문제, 인권문제 등의 해결노력과 함께 미국의 각종 대북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및 지원 등의 분야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 남북중심의 평화협정 체결

-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남과 북이 중심이 되고, 휴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 브랜드3

## 남북상생의 동서경협특구를 구축한다

### 1 현황

남북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지렛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남북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간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마지막 연결고리인 개성공단마저 위기상황에 놓임으로써 경제공동체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상호 윈윈하는 남북 경협 사업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수익성 높은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 2 정책과제

#### ●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 개성공단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남북간의 무력이 집중된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안보적 효과, 북한을 시장경제에 익숙하게 함으로서 경제공동체의 시발점이 된다는 민족통일의 맥락에서 의의가 있다.
- 정치군사적 긴장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자체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남북의 갈등과 긴장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경제논리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지속되도록 제도화 한다.

#### ● 동서축의 경협특구 구축

-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에 점에서 시작해 선으로 연결되는 경협특구를 구상해 경협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 북한 서쪽에는 개성공단을 필두로 신의주, 남포, 해주를 연결하고, 동쪽에는 나진, 원산, 안변, 금강산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동서축에 남북경협 특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브랜드4

## ‘코-유라시아(Korea-Eurasia) 시대’를 개척한다

### 1 현황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난 천년동안 대륙세력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0여년 동안 대륙이 봉쇄됨에 따라 해양국가와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해양국가와 대륙세력과의 조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이상 분단의 철조망으로 단절된 사람과 물자, 자원과 기술이 평화의 철도망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

한반도 철도연결에 관해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개보수에 합의한 바 있고, 그 후 총리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에 대해 현지조사 및 개보수 착수 등 구체적 실행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철도는 물론 가스-에너지 등 남북 및 유라시아 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우리는 21세기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한국 주도의 유라시아 시대(Korea-Eurasia)’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 2 정책과제

#### ●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 조기 개통 추진

- 남북철도망 개통으로 물류비를 절감시켜 남북경협을 확대한다.
- 해상운송(서울-신의주)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3분의 1 수준(1300달러 → 450달러)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갖는다.

#### ● 한반도와 중국대륙 종단철도, 시베리아철도망 연결 환경 조성

- 철도 실크로드를 통한 대륙 개척으로 한반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 서울-모스크바 간 해상 운송시 35일에 4,200달러가 소요되나 철도 운송시 20일에 2,400달러로 크게 낮다.
- 이를 위해 ‘동북아철도협약체’를 구성하여 한반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시킨다.

#### ● 시베리아 및 사할린의 천연가스, 원유를 운반하는 가스관, 송유관 등의 주도적 건설로 ‘코리아-유라시아’ 시대 개척

-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리기 위해 남·북·러 또는 남·북·중 삼각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에너지, 가스,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 브랜드5

##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아시아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 1 현황

지금 한반도는 탈냉전과 남북화해 그리고 동북아 협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걸맞는 한미 관계의 역동적 변화와 발전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냉전시기 남북대치의 동서진영 구조에서 형성된 군사동맹 중심의 제한적 한미 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한미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사회문화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관계의 창조적 진화와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2 정책과제

- 한미동맹을 대북역지의 군사동맹에서 21세기 평화동맹으로 전환
  - 한국과 미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이익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과거 군사동맹이라는 협소함을 벗어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의 평화 번영,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을 목적으로 21세기 평화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주도로 한미동맹의 미래역할에 대한 동북아 관련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 포괄적 협력외교의 추진
  -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는 상호이익이 함께 증대되는 방향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증진
  - 기존의 동맹이나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추진한다.
  - 북핵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6자회담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대화를 활성화시켜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나간다.

# 브랜드6

## 21세기 선진·과학군을 육성한다

### 1 현황

우리 국군은 대북역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 동북아의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주적 국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병력집약적인 군을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지향적인 선진정예군, 첨단 과학군을 구현하는 21세기 선진·과학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은 보다 선진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수준의 정보자산을 획득하며,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하는 정예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장병들의 보수, 의료지원체계, 제대군인지원정책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2 정책과제

- 군사력의 양적 팽창보다 첨단과학으로 집약된 정예과학군 확보로 질적 성장 추구
  -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지난 2006년 여야합의로 마련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2020'을 완성한다.
  - 과학화된 훈련 및 무기체계 구비를 통해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포함한 21세기 선진형 국군을 육성한다.
  - 정예과학군·기술집약형 군구조 육성을 위해 부사관은 증원하며 사병은 감축하여 각군별 간부의 비율을 40%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군비통제와 상호 군축을 추진한다.
- 군의 사기진작과 병영문화 개선
  - 직업군인의 근무의욕과 사기 증진을 위해 부대시설 및 주거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과학화된 인사·복지체계를 구축한다.
  -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한다.
  - 제대군인을 위한 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예비전력 정예화
  - 다양한 안보위협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전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동원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북한 인권개선과 ‘함께 사는 남북’을 준비한다

1 현황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속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고립, 압박, 단절 등의 방법이 아니라 접촉, 교류 등의 강화를 통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외부세력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익숙해질 때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이 강화될 수 있다.

굶주림과 탄압에 익숙한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적정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나, 엄격한 투명성을 전제조건화한다면 그 피해는 인권탄압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북한주민들에게 전가되게 된다.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단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면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투명성은 확보하되, 식량난과 미흡한 의료보건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매년 증가하여 2만 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터민 문제는 미래 한반도 통일의 시험대 성격을 띠고 있다. 고작 2만 명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통일 후 2,400만 명의 북한 주민과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의 국내 정착 실태를 보면 과연 우리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새터민의 58.4%가 자신을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하다는 현상은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새터민 관련 예산의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보면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기준인원수와 실제 지원인원수의 편차도 연평균 45%를 넘고 있다.

현행과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 제도가 계속된다면, 통일부의 다른 업무를 축소시키지 않는 한 새터민 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근본적인 재원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2 정책과제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진행한다.
- 식량난과 열악한 보건의료수준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해 적절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식량, 비료 및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기계, 의료기기 등과 그 교육방법 등을 전수하도록 한다.
-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경험수준을 제고시켜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에 익숙해지고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을 개선한다.

● ‘새터민 지원기금’으로 따뜻한 남한정착 지원

- 새터민 정착 및 고용 기금 등 각종 탈북자 지원기금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한다.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별도로 ‘새터민지원기금’과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 계층별 연령별로 상담을 강화하고 맞춤형 취업 알선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 새터민 정착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남한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심화·발전시킨다.

